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참조14)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주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48
----------	------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일

발 의 자: 박주윤, 정용한, 이군수, 추선미,
이영경, 안광림, 이준배, 최현백,
서은경, 서희경, 김보석, 황금석,
구재평 (이상 13명)

☐ 제 안 이 유

-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라.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